

데스크 시각

'100% 대한민국'과 광주·전남

정후식
현집부국장 겸 정치부장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박근혜 정부' 출범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박 당선인의 제18대 대통령 취임은 여러모로 의미가 깊다. 현정 사상 첫 여성 국가 수반이다. 과반 득표를 이뤄낸 첫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국민 대통합' 이루자더니

국민의 기대도 크다. 대선기간 내내 '100% 대한민국'을 강조하며 "어느 정부도 성공하지 못한 통서화합과 국민 대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한 약속을 생생히 기억하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국민 대통합은 인사통령과 지역균형발전에서 시작된다고 역설했다. 당시 직후 '호남총리론'이 급부상

하며 언론의 하마평에 유력 호남인사들의 이름이 수도 없이 오르내린 까닭이다.

하지만 총리와 장관 인선 결과는 '대탕평'이나 '호남 중용'과는 거리가 멀다. 내정자 18명 가운데 서울 출신은 7명, 영남 출신은 5명인데 반해 호남 인맥으로 분류되는 인사는 2명 뿐이다. 그러나 두 사람은 부친의 고향이 호남일 뿐 서울에서 출발 생활하는 탓에 '호남 출신'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역대 정권의 첫 조각에서 호남 출신 장관은 김영삼 정부 6명, 김대중 정부 5명, 노무현 정부 4명, 이명박 정부 2명 등이었던 점과 비교할 때 박근혜 정부의 호남 인사 등용은 사실상 최악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3실장 9수석' 체제인 청와대 인선에서 다소 보완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비서실장 등 힘있는 자리에는 영남 우대, 호남은 '구색 맞추기'라는 인상이 짙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새 정부 출범 이후 광주·전남과 중앙정부간 채널 단절과 소통 부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차치하면 이명박 정부 5년간 내내 겪어야했던 호남 소외가 대물림될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박 당선인이 대통합의 또 다른 핵심으로 꼽은 지역균형발전도 출발이 좋지 않다. 낙

후된 광주·전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14개 지역공약의 차질없는 실천이 필수적이지만 의료·복지공약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상당수가 후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염려가 나온다.

표준 만큼만 배려하나

여기에 기획재정부가 강력한 예산 구조조정에 나서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강화하기로 하면서 SOC를 비롯한 광주·전남의 주요 협약사업들이 유란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박 당선인은 대선기간 중 "호남의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지역민에게 각별한 약정을 표시했다. 광주·전남선대위 발대식에서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호남은 희망의 땅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했다.

비록 대선 결과와 다른 선택을 한 유권자가 많았음에도 지역민들이 박 당선인에게 기대를 걸 것은 원칙과 약속을 지켜온 정치인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어느 정부보다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지역민 대다수의 염원이다.

조각 과정에서 호남 인사가 몇이나 되는지 헤아려보는 것도 박 당선인의 약속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향후 4대 권력기

관장이나 차관 및 청와대 비서관 인선, 국정과제에 광주·전남의 현안이 얼마나 반영되는데 대해서도 지역민들은 눈을 떼지 못할 것이다.

역대 정부는 저마다 출범 초기 국민통합을 부르짖어왔다. 박 당선인이 '100% 국민 행복'을 내세운 것은 대통합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일 것이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와 규제발전이다.

승자독식주의에 편협한 정과적 이익에 충실했거나 내 사람만 쟁기고 나머지는 배척한다면 전임 대통령의 전철을 밟기 심상이다. 일부 조사에서 박 당선인 지지율이 취임도 전에 50% 이하로 떨어지며 이례적으로 냉기류가 형성된 것은 그 전兆일 수 있다.

아직 놓지 않았다. 대통합을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소통의 리더십, 포용 의지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지를 받지 못한 48% 국민의 마음을 먼저 따뜻하게 어루만져야 한다.

절기는 바이오로 우수를 지나 경집을 향하고 있다. 봄이 오고 있는 것이다. 새봄엔 더 이상 '호남 소외'나 '전라도는 삶'이라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합의 꽃을 활짝 피우기를 기원해본다. /who@kwangju.co.kr

온펜칼럼

새내기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옥영석
05년 수상자·농협중앙회 차장

신입사원들이 들어왔다.

면면이 초통한 눈빛에 호기심이 가득 차 있고, 더벅머리에 끗듯함이 넘치는 걸 보면 새로운 희망과 미래가 보이는 듯하다.

해마다 신입사원들을 만나는 시간이 첫 시간이 배정되는 게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둘째는 모습을 보면서 새 인생을 시작하는 후배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고민해본다.

기본에 충실히하는 교과서적 애기는 너무 뛰하고, 남보다 10분만 먼저 출근하라는 얘

기는 신입사원들이 들으면 웃을 것 같고, 청소하는 아줌마, 경비아저씨들에게 인사 잘하라는 충고는 중학생들에게나 어울릴 것 같고...

회사에서 어떤 인재가 핵심인력으로 평가 받고 있는지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에게 조사한 자료가 있다. 기업에서 인정하는 우수 인재 유형으로는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는 직원'(33.3%, 복수응답), '조직에 혁신적이고, 배려심 깊은 직원'(32.1%),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진 직원'(31.4%), '근태관리, 예의 등 기본에 충실했던 직원'(26.9%), '팀워크 능력을 갖춘 직원'(21.2%), '애사심이 높은 직원'(16.7%), '일을 금방 습득하는 직원'(14.1%),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우수한 직원'(12.2%) 순으로 답변이 이어졌다.

신입사원들에겐 자기 PR이나 업무능력보다 기본적 예의나 역할을 중시한다는 게 의사소통의 표준들이지만 보수적인 인사담당자들에게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내가 신입직원이었을 때 지금은 퇴직하신

김형석 교수님의 직업관에 대한 특강도 생각난다. 직장은 일하면서 생계를 해결하는 곳 만이 아닌 가족과 사회와 국가에 무언가 이바지하는 곳이어야 하고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근무하는 사람이 자신과 가족과 사회의 선순환구조를 이끌어낸다는 요지였는데, 두툼한 안경을 끌어 올리며 조용조용 말씀하셨던 표정이 빡빡이 인상적이었다.

20여 년 전 강의가 아직 눈에 선한 게 느껴지는 건 그만큼 강의하는 분의 삶이 녹아든 진정성을 보았기 때문이다.

주위를 보면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서 다른 사람들에게만 공동선을 강요하는 사람들을 어렵잖게 볼 수 있다. 자신은 자기 계발을 하지 않으면서, 후배들에게는 공부해라, 책 읽어라 말하는 선배들, 자신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에게는 철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고

광주적이면서도 세계적인 문학관이 필요하다

조진태
시인·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

일일 것이다. 뒤늦었지만 잘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간 3년이나 표류하고 있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아마도 지역 문학인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소통의 과정이 제재된 것도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

필자가 일전에 문화 지하철을 칭찬하면서, 황금으로 나서자고 외쳤던 일제강점기 친일파 국시인의 작품이 게시된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이 있다. 잘못되었다면 신속히 바로잡는 것이 도리인데 해당 기관의 행정은 지금까지도 깜깜하다. 혹시 이런 불통의 편의주의가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닐까 걱정된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자처하는 광주에서 문화는 그 위치를 찾을 수 있는데 문학관 건립마저도 참여와 소통이 아니라 배제와 출신으로 추진된다면 문화 광주의 미래가 어려울 수 불안하다. 늦었더라도 지역 문학인의 공론을 모으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기왕에 광주가 나서서 시작한 일인니 과정과 공

문화를 통해 뜻깊은 공간으로 내용이 채워지길 기대해본다.

차제에 필자는 광주에 최소한 이런 내용을 갖춘 문학관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제시해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월정신이 창작의 원천이 되고 오월문학이 디지털로 집대성되어 광주민의 특성을 갖는, 광주에서만 보고 느낄 수 있는, 광주적이면서 세계적인 문학관이 들어섰으면 하는 것이다.

5·18이 세계인류의 기록문화유산이 됨으로써 보편화되었다시피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자처할 때는 5·18 정신을 핵심 가치로 상정했기 때문일 터이고 이 핵심 가치를 기초로 다양하고 풍부한 전라도 광주의 역사문화자원을 콘텐츠화해서 광주경제를 일으키겠다는 전략이었을 것이다.

오월의 정신가치와 전라도 광주의 역사문화자원을 문화상품화 하려면 수많은 콘텐츠가 필요하다. 콘텐츠의 제작을 위해서는 기초예술의 토대가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 문학은 기초예술의 출발이자 과정이다. 새로

운 것을 상상하고 생각하며 현실화하는 능력은 기능적인 지식에서 얻어지지 않는다.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가치를 창조해내는 상상력은 문학과 함께 기초예술에서 꽂이 피는 것이다.

기왕의 오월문학은 디지털로 집대성하여 콘텐츠화하고 5·18의 무궁무진한 서사들을 상상력과 창의력의 원천으로 해서 새로운 문학을 생산해내는 기능을 갖춘 복합적 문학공간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작의 공간, 교류의 공간, 소통과 공감의 공간, 기초예술이 융합되는 공간, 그리고 작가의 작품과 창작과정이 시민과 만나는 문학공연과 전시공간의 형태가 그것이다.

아시아문화전당의 내용을 채울 문학콘텐츠가 무수히 필요하다고 보면 문학관의 성격과 역할이 어떠해야 할지 가늠할 수 있다. 늦었지만 긴 호흡으로 충분한 과정과 소통을 통해서 필자의 생각과 같이 광주적이면서 세계적인 문학관을 구상해보는 것도 그리 허무맹랑한 주장은 아닐 것이다.

대학 입학금은 신입생에 씌우는 바가지

대학신입생이 처음 등록할 때 납부하는 입학금이 대학별로 너무 차이가 크고 과연징수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사립대는 최저 15만 원에서 최고 104만 원까지, 국공립대도 최저 20만 원에서 최고 40만 원까지 쳐줄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대체 입학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징수하는 이유와 산정근거도 어떻게 되는지 불투명한 가운데 입학생들에게 거두고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대학당국의 명백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수도권 유명사립대의 경우 대다수가 100만 원 안팎인데 대체 그렇게 많이 거두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디에 사용되는지도 밝혀진 적이 없다고 한다. 수업료나 자율경비는 그

목적이 뚜렷한데 비해 입학금이란 것은 도대체 자신의 대학에 신입생이 오면 반값과 즐거운 일인데 왜 꼭 신입생들로부터 입학금이 명목으로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대까지 받아야 하는가.

더욱이 신입생들에게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하기 때문에 따져볼 겨를도 없이 무조건 납부할 수 밖에 없도록 강요하는 셈이다.

따라서 이제는 각 대학에서 왜 입학금이 필요하며 징수목적이 무엇이고 산정근거도

社說

혁신도시 이전 대상기관 축소·변질 안된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 대상공공기관의 이탈 방지에 비상이 걸렸다. 핵심인 한전의 분할 이전 불씨가 여전한데 일부 기관의 타지역 선회 등 약자에 관심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전 후보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농림수산식품정보원(농정원)이 최근 세종시로 이전을 확정했다.

농정원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하 농촌문화정보센터와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등이 통폐합돼 신설된 기구로, 나주로의 이전이 기정사실화돼 있었다.

전남도는 농정 관련 기관이 모두 나주로 옮겨오는 상황이다. 송·배전부문과 판매부문을 분리해 경제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움직임이 계속되면서 본래 이전설이 끊어지 않고 있다. 판매분야가 분할되면 300여 명의 직원들이 나주로 옮겨오지 않을 수도 있다. 전남지역 시군의 장관협의회가 한전 분할 계획 철회를 요구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혁신도시는 낙후된 지역 실정을 감안,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참여정부 때 입안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정부는 애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 대상기관이 계획대로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남도 등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도 대상기관 이탈 방지 위해 정부를 상대로 총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잘못된 고교 배정인데도 구제책 없다니

광주지역 고교 강제 배정 사태가 심각하다. 광주시교육청이 고교 배정 부작용을 사전에 알고도 무시한데다 피해 학생에 대해 구제책이 없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 교육 사회단체와 일부 학부모들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강제 배정 피해 학부모들은 18일 시교육청을 방문해 장학금 교육감에게 항의와 눈물로 학생들의 구제를 호소했다고 한다. 학부모들은 "북구 운암중 학생들이 어떻게 남구에 있는 학교로 배정될 수 있느냐"며 "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 왕복 2시간 이상이 소요된다"고 구제 대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장 교육감은 "현재로선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미 배정이 완료돼 반 배치 고사까지 끝난 강제 배정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구제대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교육청 일각에선 '배정과 관련한 학부모의 불만이 과거에도 있었다'고 치부하

고 있다니 그야말로 책임 회피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사태는 시교육청이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배정 방식에 성적을 포함할 경우 강제 배정될 수 있는 학생이 수백에서 수천명까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막아붙인 데 있다. 사립학교 선호도를 줄이고, 공립학교를 살리자는 그릇된 발상이 화를 키운 셈이다.

그런데도 시교육청은 일연반구 사과 조차 없으며,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담당 과정을 오히려 영전까지 시켰으니 어처구니 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교육단체와 해당 학부모들이 '강제 배정에 대한 보완책이 없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다.

시교육청은 책임을 통감하고 어떤 식으로 학생 구제에 나서야 한다는 더 이상 행정 난맥상을 막기 위해서도 책임과 조치는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잘못된 교육행정으로 다수의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無等鼓

인신공양은 면 옛날부터 하나님의 관습으로 굳어져 왔다. 신하를 왕과 함께 무덤에 묻는 순장이나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는 심정의 사례처럼 개인을 위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국가나 민족, 씨족의 풍년·풍어를 빌거나 승리를 기원하는 행태였다.

집단적인 이벤트로 치러진 만큼 규모도 커졌다. 지난 1950년 덴마크 헬싱고르의 블룬 놀자내나 독일 등지에서 발전된 고대의 집단매장지도 대표적인 인신공양의 현장 가운데 하나다. 학자들의 연구결과, 덴마크나 독일 지역에서 놀이 풀리거나 잘 살해된 체 알몸으로 놀 속에 묻혀 있던 700여 구의 시체들은 대지와 풍요의 여신에게 바쳐진 제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발견된 시체들은 대부분 온갖 종류의 씨앗들로 만들어진 특별한 의식용 음식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멕시코 마야족의 사제들은 치첸이차의 신성한 연못에 수십 년간 걸쳐 800여 명에 이르는 희생자를 밀어넣었다.